

## “정부, ‘전남 국립의대 설립’ 약속 신속 이행해야”

### 국회 범도민 결의대회·토론회

도민·향우회원 등 600여명 참여  
3월 의대 정원 배정 최우선 과제  
대학 통합해 ‘1도 1국립대’ 부응  
“의료 취약지 인프라 강화 시급”

정부의 의대 정원 배정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전남도와 지역 정치권 등이 ‘전남 국립의대 설립’을 위해 막판 총력전에 나섰다.

전남 국립의대 신설을 약속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국면과 장기화되고 있는 의정갈등으로 인해 전남 국립의대 추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서다.

전남지역 의원을 비롯한 13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주관하고, 전남도 국립의과대학 설립 범도민추진위원회, 국립목포대·국립순천대, 국회 좋은정책포럼이 공동 주최한 ‘전남도 국립의과대학 설립을 위한 국회 대토론회와 범도민 결의대회’가 24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행사는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지역 국회의원, 전남도의회 의장과 도의원, 범도민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 양 대학 총장, 전남 기초지자체장, 지역민, 전국 각 지역 향우회원 등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부 결의대회, 2부 토론회 순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지난해 3월 정부가 대국민



김영록 전남도지사, 김원아·박지원·서삼석·이개호 국회의원, 전남지역 대학교 총장 등이 24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라남도 통합대학교 국립의과대학 설립 국회 대토론회 및 결의대회’에서 국립의대 설립에 대한 200만 전남도민의 간절한 염원과 강한 의지를 전달하기 위해 참석자들과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담화를 통해 약속한 ‘전남도 국립의대 설립 추진’ 이행을 정부에 강력 촉구하고, 국립의대 설립에 대한 200만 전남도민의 간절한 염원과 강한 의지를 전달했다.

범도민추진위원회는 결의문을 통해 “전남도는 정부 약속을 믿고 더 큰 노력을 기울여 정부의 ‘1도 1국립대’ 정책에 부응하는 대학 통합까지 성사시키며, 정부가 기대한 수준을 뛰어넘는 성과를 만들어냈다”며 “이제는 정부가 약속을 지킬 차례다. 의료대란 해결을 위해 의료계와 대타협을 하되, 전남 국립의대 신설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해달라”고 건의했다.

이어진 전문가 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은 임혁백 고려대 명예교수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국립의대가 없는 전남은 복지 사각지대로, 의대 설립 문제는 의대 정원과 사실상 별개로 논의될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약속한 ‘전남 국립의대 설립’이 잘 이행돼 도시권은 물론 오지같은 섬에 혼자 사는 주민까지도 대한민국의 따뜻한 품 속에서 행복하게 살게 되길 바란다”고 말하며 전남 국립의대 신설 필요성을 강조했다.

허정 범도민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전남 국립의대 설립은 지역 필수 의료 확

충과 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한 가장 시급한 과제이자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책무”라며 “정부는 전남도민의 간절한 외침에 응답해 국립의대가 설립되도록 신속한 결단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영록 지사는 “의료개혁은 정부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체절명의 과제”라며 “정부와 의료계가 대타협을 통해 의료문제를 해결하되, 이 과정에서 정부가 대국민 약속한 ‘전남 국립의과대학 설립’을 반드시 확정해줄 것을 강력 건의한다”며 “전남도는 국립의대 설립이 완수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르면 오는 3월 중 의대 정원 배정안을 확정할 예정으로, 전남도는 정부, 국회 등에 적극 건의하는 등 국립의대 설립 추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앞서 목포대와 순천대는 지난해 12월 31일 ‘국립한국제일대학교(가칭)’라는 이름으로 교육부에 대학 통합 신청서를 제출했다. 양 대학은 3월 복지부와 교육부를 통해 의대 정원을 배정받고,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예비인증심사 통과를 바탕으로 오는 5월 통합의대 이름으로 대학입학전형 모집요강을 발표할 예정이다.

그러나 전남 국립의대 신설을 약속한 윤 대통령의 12·3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탄핵 국면과 의정갈등 장기화로 전남 국립의대 신설에도 비상이 걸린 상황이다.

특히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17일 열린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현행 대입 시행 계획인 의대 정원 2000명에 얽매이지 않고 수급 추계를 제대로 해 논의하겠다”고 밝히며 사실상 의대 정원 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정부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우려의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정국 불확실성과 상관없이 의료 취약지역인 전남의 지역의료 인프라 강화 및 공공의료 인력 양성 필요성은 변하지 않은 만큼 전남 국립의대 신설 명분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했다.

오지현 기자 jihyun.oh@jnilbo.com

## 헌법재판소, 오늘 尹 탄핵심판 변론 종결

국회·尹측에 종합 변론 시간 부여  
최종 결정 선고는 약 2주 뒤 전망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을 25일 종결한다. 최종 결정 선고는 약 2주일 뒤에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현재는 국회 대리인단과 윤 대통

령 대리인단 등 양측에 2시간씩 종합 변론 시간을 부여하고, 정정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윤 대통령에게는 최종 의견 진술을 시간제한 없이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당일 변론이 오후 2시에 시작하는 만큼 실제 최종 진술이 무한정 길어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는 25일 미처 조사하지 못한 서면 증거를 살핀 뒤 변론 종결 절차에 돌입한다. 변론 종결 이후에는 재판관 평의를 통해 탄핵 여부에 대한 의견을 모으고 판결을 통해 결론을 도출한 뒤 결정문 작성에 들어간다.

최종 선고 시점은 노무현·박근혜 전 대

통령 사례와 유사하게 변론 종결 약 2주 뒤로 전망된다.

마지막 변론을 하루 앞둔 24일 윤 대통령 측과 국회 측은 최종 변론 전략을 가다듬으며 막바지 준비에 힘을 쏟았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주말에 이어 이날도 윤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대통령을 접견하고 변론 전략을 세웠다.

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의 최종 의견 진술과 대리인단 종합 변론을 통해 ‘12·3비

상계엄의 정당성과불가피성’을 강조한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도 구치소 내에서 육필로 직접 진술문을 작성하며 최후 진술을 준비했다.

국회 대리인단은 이날 저녁 변론 전략을 점검하기 위한 최종 회의를 열었다. 지난 22일 오전 열었던 회의를 바탕으로 종합 변론의 틀을 완성했다. 국회 측 종합 변론에서는 대리인단 대표인 김이수·송두환·이광범 변호사 등 중량감 있는 이들이 전면 나선다. ▶관련기사 6면 연합뉴스

## 제22회 호남마라톤

**대회일시** 2025년 4월 20일(일) 오전 8시 출발

**대회장소** 승촌보

**대회코스** 승촌보 ~ 나주 영산교

**종 목** 남·여 개인전 10km, 하프

**참 가 비** 40,000원 (기념품 지급)

**참가신청** 호남마라톤 홈페이지 (www.호남마라톤.kr/)  
이메일 419marathon@hanmail.net

**접수마감** 2025년 4월 3일(목) (선착순)

**참가문의** 061) 375-1201

**주최** 全南日報 **주관** 전일엔젤스 마라톤세상

**후원** 전라남도 광주광역시교육청